

국민의힘 전대, 이준석 vs 反이준석

이 "투표율 높을수록 내가 유리"
나경원·주호영, 불안심리 호소
"전략투표로 당심 모아달라"

한 사람이 누구냐"며 나 후보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맞받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중진 주자들의 영입 노력에 관해 "일방적인 구애" "스토킹"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본인을 '유승민계'로 몰며 공정성 시비를 제기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이 후보의 이같은 '강공 모드' 배경에는 다른 후보들을 큰 표차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도 깔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월의 0선'으로, 당권을 잡아도 초반 기선제압에 실패하면 향후 당을 장악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맞서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리스크'에 대한 불안심리를 파고드는 전략을 펴고 있다. 영남권, 장년층에 포진한 이른바 '열성당원' 표심이 핵심 타깃이다. 이들은 선거가 중반전을 향해 갈수록 위기감을 느낀 당심이 뒤늦게 결집하며 당원 투표에서 탄력을 받고 있다고 자신한다.

나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변화와 쇄신에 대한 열망을 잘 안다. 그러나 더 나은 변화, 더 좋은 변화가 아니면 더 큰 혼란과 갈등, 분열만 일킨다"며 "전략적 투표로 당심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다.

주 후보는 "바람에 휩쓸려가지 마시고 누가 당대표가 돼야 전략적으로 정권교체에 유리한 지 판단해 달라"며 "이미 벌써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어려워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와 안 대표 사이 '구원'을 겨냥한 것이다. 토론회가 끝나고도 이들은 이 후보를 두고 "예외가 없다"(나경원), "신중하지 못하다"(주호영)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후보들은 이날 오후 5시 최종 마감된 사전투표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은 내부적으로 최소 30%대 중후반을 웃도는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반당원 투표율에 관심이 쏠린다. 대의원·책임당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이준석 지지성향'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투표군이어서다.

당 관계자는 "진영 무관 불문율로 여겨온 '당원 투표 = 조직표' 등식이 깨진다면 이번 전대는 정당사에 새 장을 쓰게 될 것"이라며 "승부를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기본소득 반대서 경선연기·개헌까지 여 대권주자들 反이재명 전방위 공세

이낙연·정세균 개헌 제기
'구출' 앞세운 이재명 압박
경선연기 놓고도 논쟁 가열

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선 때마다 개헌 이슈가 등장했지만 모든 것을 뺐어들이는 블랙홀처럼 돼 버리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을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주자들은 이 지사의 이런 입장을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민생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민생과 개헌 논의는 함께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구출을 위한 제도가 헌법에 담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라고 이 지사를 예들러 비판했다.

경선 연기를 반대하는 이 지사와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주자들 간 전선도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기본소득 찬반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정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이날 당 소속 경기도 17개 기초자치단체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기본소득 반대로 경선 일정 연기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간담회 참석을 전하며 "상당수 자치단체장이 전면적 기본소득 실시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우리당이 승리하기 위한 편이 요동칠 여동적 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경선 흥행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선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를 앞두고 추격자들의 반(反)이재명 전선이 여러갈래로 다충화하고 있다. 이낙연, 정세균 후보 등 또 다른 대선주자들이 기본소득 반대, 경선 연기론에 이어 이번에는 개헌론 카드를 꺼내들면서다. 개헌론으로 불을 지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독주하고 있는 판을 흔들려보겠다는 포석으로, 이 지사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을 비판했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경선 연기론에 가세한 데 이어 8일 개헌으로 쌍끌이 공세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제안했다. 두 주자는 공통으로 국민의 기본권 강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차기 대선이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했다.

추미에 전 법무장관도 "토지공개념 3법 제정 제안을 환영한다"며 이 전 대표의 개헌론에 호응했다.

그러자 이 지사 측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선을 두 달 미룬다고 방역 염려가 사라지고 흥행에 성공할 거라는 것은 불확실한 희망사항"이라고 반박하며 경선 일정을 현행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성범죄 근절 TF 첫 회의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민홍철 TF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판결"...민주, 일제강제징용 소송 각하 반발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국민 정서와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유는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위신 추락이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는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의 국격보다 과거 전범국가의 국익을 우선한 처사

아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이번 판결이 항소심에서는 바로 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도 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번 판결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판결에 정반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이 법원의 결정을 번복했다.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또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와 일본 법원이 주장하고 있는 논거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법원이란 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탄희 의원은 SNS에 각하 판결 관련 기사를 올리며 "과거에 사로잡힌 판결 하나가 세상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이 의원들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동조를 표시했다. 김진애 전 의원은 SNS에 "우리나라 법원 맞습니까? 일본 법원 아닙니까?"라고 비판 뒤 "이번 정지 판사들까지 10년 임기를 보장해주어야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면은 부담"...여권서 커지는 이재용 가석방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하는 주장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당내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6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 사면 문제에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 대표는 이날날인 7일 "헌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사면하는 방식보다는 국민 누구나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면서 가석방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앞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도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이뤄지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

관 결정으로 시행된다. 그만큼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속 수감돼 오는 8월이면 가석방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이 부회장만 꼭 집어 사면해줌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느냐 다른 형사법들과 함께 대규모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부담 역시 가석방 우회론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국정농단의 주역인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안 된다는 반발 역시 찾아들지 않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이 없으면 반도체와 백신이 무너질 거라는 식으로 공포심을 불릴려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옹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나주 요양병원 「급 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외 7층 2천여구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실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자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보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총창동 5가 상업지역 도매상 주통로 5층 승강기 유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매 13억원 전면 18m 접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안 주통로 코너 점포 8칸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 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4) 광주 북 문흥동 3층 상가 대 660㎡ 연 2,000㎡ 상업지역 1층점포 10칸 매 51억원 (보 5억5천만원 월 2천2백만원 포함)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2층 200㎡ 수리사용가 산아래 마을 뒷 아미산 바라본 정남 매 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간 20분 메타기루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사적 정남 경관수려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온천 인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중기 ☎ 010-3635-793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힐플러스 길 건너면 동광주빌딩 내

상가매매 (상무/지주)	장성토지 (분양/매매)
<p>1) 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 8천만원</p> <p>2)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 2천만원)</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 중심상업지역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p> <p>010-6670-9800</p>	<p>광주에서 20분(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p> <p>1) 100평 → 8천 2) 150평 → 1억1천 3) 300평 → 2억</p> <p>총 1,778평 → 9억 (용 4억 가능)</p> <p>(주택, 주말농장, 창고, 투자 적합)</p> <p>062-382-5500</p>